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오동나무라는 이름의 섬, 오동도

매년 10월이 되면 전 세계 뉴스에 등장하는 식물이 있다. 호주 등지에서 보라색 꽃을 피우는 나무, 자카란 다. 이 식물은 보편적인 꽃 색인 흰색, 노란색, 분홍색 이 아닌 형광빛의 이색적인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다 이 꽃이 도시 전체를 보랏빛으로 화려하게 물들인다. 그 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나무에 열광한다.

물론 자카란다는 우리나라에는 자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후가 맞지 않아 실내에서만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지에서 정원수로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아쉬울 것도 없다. 우리나라에는 자카란다만큼 아름다운 보라색 꽃을 피우는 오동나무 가 있기 때문이다.

오월이 되면 구도심과 주택 단지 혹은 마을 등지에서 오동나무가 보라색 꽃을 만개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들은 예로부터 마을 어귀에 많이 심어지는 나무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내가 사는 지역은 최근에 조성된 신도 시인지라 오동나무를 볼 수 없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오동나무가 조경수로 많이 심어지지 않는 듯하다.

사실 나는 지나치게 화려하고 튀는 색이라는 인상 때 문에 보라색을 딱히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식물을 공부하고 자연이 만들어낸 은은한 보랏빛 꽃들을 관찰 하며,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 비꽃, 솔체꽃, 증꽃나무…. 특히 오동나무의 꽃색은 보 라색과 회색 그 경계에서 자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절제된 화려함을 가졌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는 오동나무는 대부 분 참오동나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동나무 와 참오동나무를 볼 수 있는데, 오동나무는 우리나라 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고 참오동나무는 동북아를 아 우른다. 둘의 결정적 형태 차이는 꽃 안에 자주색 점선 의 유무다. 참오동나무는 점선이 있고, 오동나무는 선 이 없다. 오래 전부터 마을 어귀에 많이 심어진 종은 정 확히는 꽃에 자주색 점선이 있는 참오동나무다.

오동나무는 특별한 장소를 떠올리게도 한다. 나에게 는 여수가 고향인 친구가 있다. 우리는 대학교에서 만 났고,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여수로 내려간 후 플로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또 친구의 아이를 보 기 위해 여러 번 여수를 찾았다. 매번 친구는 내게 여수 의 식물 장소를 소개해 주었고, 때마다 그는 나를 오동 도로 데려갔다. 친구는 육지와 오동도를 잇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나와 함께가 아니면 오동도에 잘 가지 않 게 된다고 말했다. 나는 친구의 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존재, 장소일수록 소홀하기 마 련이다. 신도시로 이사를 가서야 비로소 오동나무를 찾게 된 나처럼 말이다.

오동도에는 동백나무가 유난히 많다. 그러나 이 섬 의 이름, 오동도는 의외로 오동나무에서 유래했다. 작 년 내부 순환도로를 지나다가 터널 입구의 오동나무를 보고 문득 오동도 이름이 떠올랐고, 이 나무와 섬 둘의 이름이 같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오동도에 오동나 무가 아닌 다른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무

이 섬이 오동도로 이름 붙은 연유는 두 가지 이야기 로 알려진다. 하나는 하늘에서 본 섬 모양이 오동나무 의 잎을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 그 리고 원래 이 섬에 오동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이야 기가 있다. 고려 말 이곳에 오동나무 열매를 따먹으려 봉황이 날아온다는 소문을 들은 공민왕이 오동나무를 베어 버리라 명했다고도 한다. 봉황이 나타난다는 것 은 이 지역 출신의 이가 후대 왕이 된다는 징조였기 때

그러고 보면 이름이란 것은 별것 아닌 듯하면서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같다. 신종 식물 명명을 위해 고 민하는 동료 식물학자를 보면서도 매번 생각한다. 식 물명이든 사람의 이름이든 또 지명이든 모든 것은 이름 으로서 존재한다.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기억된다는 말이다. 오동나무가 무성했던 섬 오동도. 지금 이곳은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지 만 나는 오동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보랏빛 꽃이 무 성히 피었던 그 언젠가의 오동도를 상상할 수 있다.

〈식물 세밀화가〉

社 說

'금품·비방' 혼탁 치닫는 선거 엄중 단속을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도세 명이 포함돼 있다. 금품 제공이나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 표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 다. 당내 경선 등을 둘러싸고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 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에 대한 공 천을 무효화하고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진군 선거 관리위원회는 최근 강진의 한 음식점에서 강 후보와 함께 모임에 참석한 A씨가 다 른 참석자에게 현금을 건넨 영상을 제보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강 후보 측 은 자신과 관계없는 행동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 광주·전남 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 련해 지금까지 76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는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 23건, 허위 사 실 공표 20건, 후보자 비방 및 사전 선거 운동 각 일곱 건 등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조사 대상자는 143명으로 기초단체장 후

담양군수 후보 A씨는 경찰 수사 과정 에서 선거구민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CCTV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지인에 게 조의금을 건넨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 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친족 (8촌 이내) 이외의 자에게 조의금을 주는 것을 기부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광산구 청장 후보 B씨도 "올 1월 광산구 한 식당 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현금 30만 원 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후 보는 "제기된 의혹은 허위"라며 맞고소한

여기에 광주시·전남도 선관위에 접수된 위법 신고까지 포함하면 모두 200건에 육 박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공식 선거 운 동이 시작되고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 관위와 경찰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단속과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후보들도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으 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다.

전두환 찬양 흔적들 지워 '오월' 바로 세워야

전두환은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 한 데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타계하기 4년 전 펴 낸 회고록에서도 5·18 학살의 진상을 밝 히지 않고 자신의 공적만을 미화했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는 전두환을 찬양 하거나 미화한 시설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5·18민중항쟁 기념 대전행사위원 회는 그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충남기계공고 내에 세워진 '전두 환 방문 기념비'를 철거할 것을 촉구했 다. 경남 합천군 시민단체인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오는 18일 합천읍 일해공원 앞에서 5·18 기념식을 열고 전두환의 별호를 딴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군민대회를 개최할 예정 이다. 5·18 42주년을 맞아 '전두환 흔적 지우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그동안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충 을 기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북교육청은 2020년 일곱 개 공립학교에 있던 전두환 하사금 건립 표지판을 모두 철거한 바 있다. 국가보훈처도 2년 전 전 두환의 글씨를 받아 만든 대전 현충원 현 충문 현판을 '안중근체'로 교체했다. 전두 환 부부가 1988~1990년 머물렀던 강원 도 인제 백담사도 2019년 전두환의 흔적 을 모두 없앴다.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 을 찾은 참배객들은 입구 바닥에 파묻힌 전두환 비석을 밟고 지나간다. 광주시 서 구 5·18자유공원 입구에도 '선진 조국의 선봉'이라 쓰인 전두환 비석이 거꾸로 땅 에 묻혀 있다. 이 모두 살아생전 사과는커 녕 반성조차 없었던 전 씨에 대한 준엄한 질타이다.

5·18 학살의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을 미 화한 기념물이나 흔적들을 더 이상 방치해 서는 안 된다. 그것이 5월 영령들의 참뜻

의료칼럼

5·18의 선한 사마리안 정신과 생명 나눔



최용수 광주기독병원 병원장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의료 활동과 관련된 특징 은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발포에 따른 집단 사상자 치료의 선한 사마리안 정신과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생명을 살리고자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자발적 으로 헌혈에 동참한 생명 나눔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 총서 기록에서 당시 의료 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는 '전라남도 부상자 지 원 현황 보고서'인데, 이를 기준으로 광주시 네 개 병원 에서 치료했던 환자를 진료 일자별로 재구성해 보면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발포에 따른 부상자 치료 현 황을 이해할 수 있다. 도청 앞 발포된 5월 21일 광주시 내 병원에서 5·18 관련 부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진료 현황을 분석해 보면 광주기독병원 70명 (47.9%)을 비롯해 적십자병원 45명(30.8%), 전남대 병원 26명(17.8%), 조선대병원 5명(3.4%)이다. 이 어 5월 22일은 전남대병원 29명(46.4%), 광주기독병 원 14명(25%), 조선대병원 12명(21.4%), 적십자 병 원이 1명(1.7%)이다.

부상자 중 구타 등을 제외한 총상 관련 환자를 기준 으로 재구성하면 당시 진료 현황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 할 수 있다. 5월 21일 총상 관련 환자는 광주기독병원 38명(60.3%), 적십자병원 15명(23.8%), 전남대병원 10명(15.8%)이다. 또 5월 22일에는 전남대병원 13명 (46.4%), 광주기독병원 8명(28.5%), 조선대병원 6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5월 21일 과 22일 양일에 발생했고, 그중 총상(50.5%)과 구타 등과 관련된 84명 (41.5%)의 사상자에 대한 입원 치료 를 광주기독병원에서 담당했다.

명(21.4%), 적십자병원 1명(3.5%) 등이었다.

전반적인 의료 상황에서 광주기독병원에 많은 환자가 몰렸던 이유를 당시 재직했던 광주기독병원장의 보고서 는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계엄군의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은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었지만 광주기독병 원은 휴진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광주기독병원은 예 전부터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공감대, 셋째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병원에 오길 두려워했었 는데 광주기독병원은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이라

는 신뢰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광주기독병원은 민주화운동 이후에도 부상자들을 가족처럼 치료하고 돌봄으로써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 을 빛냈다. 5·18 당시 의료 현장에는 수혈할 피가 부족 하다는 소식에 생명을 살리고자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 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다. 현장의 응급실장 회 고에 의하면 헌혈을 원하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으며, 수혈 백이 없다고 하니 시민들이 적십자 병원에서 가져다주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여고생이었던 금희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헌 혈을 호소하는 가두방송을 듣고 발걸음을 광주기독병원 으로 향했다. 한 시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겨우 헌혈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 양림다리를 지날 때였다. 어 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금희의 배와 허리에 명중했다. 금 희는 자신이 헌혈한 바로 그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조 금 전에 헌혈하고 갔던 여고생이 피투성이 시신으로 다 시 응급실에 실려 오자 보는 이 모두가 경악했으며 형용 할 수 없는 슬픔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다. 당시 긴 박한 상황에서 광주시민은 남녀노소 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 돕고 위로하였다. 금희가 나누고자 하였던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오월의 생명 나눔 정신이 미래의 사명자로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자 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자 신의 영광과 인기를 위해 구제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한데 이제 왼손도 알게 하고자 함은 5·18 광주민주화운 동이 4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는 단순히 지나 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흔적이 있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선한 사마리 아인 정신과 생명 나눔 정신, 즉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 거라는 점에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 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라는 성경 말씀 같이.

기 고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에서부 터 최남단인 제주까지 모든 시도에 위법 건축물이 존재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위법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 이 살고 있는 건축물이 위법 증축되었는지, 일하고 있 는 사무실이 허가받지 않은 용도인지, 식사하고 있는 음식점이 위법으로 수선하였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관 심조차 갖지 않는 실정이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전도 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담양 펜션 화재 등 위법 건축물 방치에 의한 재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 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너무나도 미흡하다. 2006년 신 설된 구미역은 주차장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하다가 2009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위법 건축물로 남아 있으나, 공익 시설이라 는 핑계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다. 성주군의 대 형 호텔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 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으로 증축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불법 영업 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 및 대형 기업체가 오히려 당당하게 위법 건축물을 운영 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는 이에 강

시민은 배고픔이 아닌 불공정에 봉기한다

경 대응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및 대형 기업체는 이슈화된 사례에 불과하 다. 서초구의 교대역 인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휴대 전화 매장은 대지 면적 36㎡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물 을 지을 수 없음에도 화재 위험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 널 벽체와 지붕으로 건축하여 소액의 이행강제금만 납 부하며 무허가 건축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2021년 6대 광역시 기준 약 368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 나(부산 180억·광주 65억· 인천 57억·대전 23억·울산 22억·대구 21억 원), 위법 건축물 건축주의 대다수가 연간 이행강제금을 수월하게 납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법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법적 규제에 대한 현 실태와 국외 선진국 대응 사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국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간단명 료하지 않으며, 건축주의 안전 및 법규에 대한 수준도 상당히 미흡하다. 먼저 위법 건축물에 대한 법적 규제 는 건축법·주자장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과 그 시행령 등 다수의 복잡한 법 령 체계와 잦은 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 축 행정 담당 및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물 내부 용도변경의 경우 현행법상 건축주의 허가 없이 강제 진입이 어려움에 따 라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에 건축주는 외부에서 확인 하기 어려운 구획 공간을 위법적으로 증축 또는 용도변 경하고, 높은 수익 대비 소액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 면서 현행 유지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무허가 건

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해 법적으로 임대 계약 자체를 불가하게 함은 물론 건축주로 하여금 세입 자의 임대 비용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으며, 정부의 시 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 및 강제 철거를 진행 하게 되어있다.

우리 정부는 위법 건축물의 근절을 위해 건축법상 벌 칙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지자체도 위법 건축물을 막 기 위해 건축 단계별 예방 대책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 건축물 에 대한 인식 변화는 미미하고 이행강제금만 문제 없이 납부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정부·지자체 대책이 적정한가를 고민 해야 한다. 아무리 과한 벌금을 청구해도 해당 건축주 가 이를 감당하는 수익을 창출한다면 위법 건축물은 사 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순 벌금이 아닌 건축 허가 취 소, 강제 철거, 나아가 실형 등의 강화된 규정과 점검 및 단속을 위한 진입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위법 건축물 은 줄어들 것이다.

이제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화된 규정 적용 을 위해 관련 법령 체계를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 하여 단계별로 실행해야 한다.

논어에서 유래된 '불환빈 환불균' (不患貧 患不均)' 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은 배고픈 것에 봉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봉기한다는 말로, 누군가의 위 법적이고 불공정한 이익으로 타인이 재난을 겪고 불공 정을 느낀다면 이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 간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가족과 후세의 목숨을 담보로 지어진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 강경한 대 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無等鼓 🕡

어떤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는 데 필요 한 공문서로 과거에는 호적등본이 있었 다. 가족 관계부터 본적지, 생년월일, 결 혼, 이혼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보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1922년 12월 조선총독 부령 제154호 조선호적령이 제정되면서 작성되기 시작한 호적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한 사람을 적어 내려 갔다. 해방 이후 남성 우선적인 호주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2008년 헌법재판 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호적

토지에도 탄생부터 변 천 과정, 종말까지를 기 록한 문서가 있는데, 이

제도는 폐지됐다.

를 지적이라고 한다. 일제가 토지 소유 증 명, 세금 부과, 국유지 점유 등을 위해 토 지조사사업(1910~1918)을 벌여 만들었 다. 이 종이로 만든 지적은 오는 2030년에 야 비로소 재조사를 통해 디지털로 구축될 예정이다. 지적은 필지 분할, 합필 등을 통 해 해당 지역의 성장・발전과 관련된 이야

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쇠락한 광주 구도심이 어느 순간 아파트 숲으로 변하고 있다. 아파트는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해당 토지가 면면이 가지고 있던 역사를 지워 버리고, 다양한 용도로 구성돼야 할 도심 을 주거 기능으로만 채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 온 광주의 이야기도, 중요한 근현대 건축 물이나 시설도 싹 쓸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알게 모르게 학동 팔거리 갱생 지 구, 남광주역, 광주여고, 호남은행 건물 등 광주 구도심이 간직해왔던 소중한 유산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광주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 구도심의 경관과 시설 구도심을 살리자

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혁 신적인 공공 투자를 통해 거주 편의성을 높이고,

매력적인 공공시설로 되살려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구도심에는 광주의 정 체성·장소성·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 도심은 어디나 비슷한 구조와 경관을 보인 다. 주거·상업·녹지 등 용도지역을 적절하 게 배치해 살기에 편할 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 담고 있는 이야기는 별 것이 없다. 광주의 매력은 구도심으로부터 발산된

다. 구도심이 없다면 광주도 없다. 구도심 살리기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이유 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FA X 222-0195⟩

(FAX 222-0195)

⟨FAX 02-773-9335⟩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치 부 220-0652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부 220-0693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